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9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2.04~2025.12.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권리(인권/평화), 대응, 평가, 가치, 감귤
경제·관광	감귤, 기반, 여행(관광객), 생산, 금융
지역·사회	대응, 왜곡, 민원, 태영호, 유족

※ 분석 기간 : 25.12.04.~25.12.10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권리(인권/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평화인권현장 공식 선포 - 4·3 역사 왜곡과 유족 권리 - 포괄적 권한 이양과 도민 권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경 유공자 지정 강력 대응 - 기후위기 및 재난 안전 대응 -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평가 - 재난 관리 및 행정 역량 평가 - 차고지 증명제 도민 인식 평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의 평화·인권 가치 확산 - 생태·환경 및 녹색 건축 가치 - 지역 자원 및 문화 콘텐츠 가치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안정 및 유통 관리 -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홍보 - 신제품 육성 및 영농 혁신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데이 10주년 및 소비 촉진 행사 - 제주 감귤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 - 고품질 재배 기술 전파 및 명인 선정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및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 혁신 - 바이오 및 식품 산업 제조 인프라 강화 - 자율주행 및 교통 인프라 고도화
	여행(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여행 트렌드 '런트립(Run-Trip)' 확산 - 관광객 식음료(F&B) 소비 패턴 분석 -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수용 태세 개선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채소 과잉 생산 대응 및 수급 안정 - 수산 자원 회복 및 대량 생산 기술 확보 - 제주 고유 생물자원 활용 및 제품화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자산 증가와 소득 불균형 현황 - 지역 금융기관 건전성 및 연체율 동향 - 금융권의 지역사회 공헌 및 나눔 활동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형동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 - 해안 경계 및 마약 유입 대응 강화 - 버스 화재 및 학교 폭력 대응 체계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영호 전 의원 4·3 왜곡 판결 -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조치 - 박진경 대령 유공자 서훈 논란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사망 사건과 민원 대응 부실 - 상하수도 등 생활 민원 해소 총력 -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평가 대응
	태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영호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 4·3 단체의 비판 및 사과 요구 - 4·3 역사 왜곡 처벌 입법 촉구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유족회의 명예회복 및 법적 승리 - 교사 사망 사건 유족의 진상조사 거부 - 쿠팡 배송 기사 유족의 음주 누명 탈피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2월 4일~12월 1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07건임
 - 정치·행정 분야 333건, 경제·관광 180건, 지역·사회 294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권리(인권/평화), 대응, 평가, 가치, 감귤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권리(인권/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식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고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12월 10일 공식 선포함. 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등 도민 삶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약속이자 규범으로 기능함. · 선포식 과정에서 일부 보수·종교 단체가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이 있었으나, 오영훈 지사는 어떠한 폭력과 차
-------	-----------	--

정치·행정	권리(인권/평화)	<p>별도 응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도는 향후 헌장의 가치가 행정 전반에 스며들도록 인권 포럼 개최 및 교육을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p> <p>- 4·3 역사 왜곡과 유족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제주도와 도의회, 4·3 단체들은 이를 반인권적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유공자 지정 취소 및 관련 법규 정비를 강력히 촉구함. · 사법부가 태영호 전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유족의 권리를 인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행정부의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은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비등함. 도민 사회는 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권리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함. <p>- 포괄적 권한 이양과 도민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개정 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됨. 특히 지하수 공수화 원칙 등 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존치해 도민의 공공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강조됨. · 제주도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자치 분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례 위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 의무화 및 규제 심사 강화 등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임.
	대응	<p>- 박진경 유공자 지정 강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4·3 학살 주범으로 지목받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진경 추도비 인근에 ‘역사적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이는 국가보훈부의 결정이 4·3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사실을 알림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적 조치임. · 오영훈 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잘못된 보훈 행정이 도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섬. 또한, 도내 곳곳에 설치된 4·3 왜곡 비석 및 표지석에 대해서도 정비 자문단을 통해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는 등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4·3의 정의를 지켜낼 계획임. <p>- 기후위기 및 재난 안전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기후재난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재난 관리 역량을 인정받음.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

	대응	<p>심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서도 1100도로 등 산간 도로의 제설 대책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설경버스) 증편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있음. 또한, 상하수도 동파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겨울철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함. <p>-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 통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군·경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함. 오영훈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도정 운영 원칙을 천명하고, 군과 경찰에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주문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 ·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역시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대응함. 제주도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위험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위기 상황을 관리함.
정치·행정	평가	<p>-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9억 원을 감액 조정하며 고강도 심사를 진행함. 의회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신규 항로 손실 보전금 등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엄격히 평가하여 삭감하고, 이를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과 민생 불편 해소 예산으로 재배정함. · 이번 예산 심사는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이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둬. 도의회는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조정하는 성과를 거둬. <p>- 재난 관리 및 행정 역량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기후재난 대응 평가’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국비 인센티브를 확보함. 이는 폭염,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 예방 실적과 민관 협력 대응 체계의 우수성을 중앙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도의 재난 관리 역량을 입증함. · 또한, 제주시 등 행정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사업 평가 및 의료·돌봄 통합 지원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복지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함. 이러한 외부 기관의 긍정적 평가는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 사회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국비 확보 및 정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됨.

정치·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증명제 도민 인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 조사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존함. 도민들은 제도 폐지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영주차장 확충과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함. · 조사 결과는 주차 질서 개선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줌. 도는 이러한 도민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의 평화·인권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는 제주4·3이 남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보편적 인권 가치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임. 헌장은 4·3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도민의 다짐을 담고 있으며, 제주의 역사적 아픔을 미래 지향적인 평화 가치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오사카 국제 특별전 개최 등은 4·3의 가치를 세계화하려는 시도임. 도는 4·3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자산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통해 정의로운 해결의 모델로서 그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생태·환경 및 녹색 건축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녹색건축 확산 세미나'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와 민간 영역의 녹색 건축 확산은 기후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제주의 청정 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함. · 폐교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내일마을 공공주택)은 방치된 공간을 주거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생산하여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도임. 이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음. - 지역 자원 및 문화 콘텐츠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글로벌 콘텐츠 포럼'에서는 제주의 신화, 자연, 해녀 문화 등 고유한 지역 자원을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논의됨. 제주의 독특한 문화 원형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이며, 이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문화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음. · 감귤, 수산물 등 제주의 청정 1차 산품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제주의 브랜

정치·행정	가치	드 가치를 상징하는 핵심 자원임. 제주도는 감귤 데이 행사, 수출인의 날 기념식 등을 통해 제주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품질 관리와 물류 혁신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소득 증대와 제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안정 및 유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노지감귤 본격 출하철을 맞아 도외 도매시장에서의 상품 외 감귤 (비상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음. 최근 감귤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는 비규격 감귤의 시장 반입을 차단하여 제값을 받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감귤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 생산량 관측 결과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예상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선별 출하가 가격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 도는 감귤출하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물량 조절 및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만감류 등 품종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함. -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감귤 데이(12월 1일)’ 기념행사는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됨. ‘겨울철 1등 과일’이라는 의미를 담은 감귤 데이를 통해 시식회,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에게 제주 감귤의 매력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함.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보인 연말 한정 ‘스페셜 감귤 패키지’가 주문 폭주를 기록하며 감귤 소비 확대에 기여함. 이는 지역 특산물인 감귤과 흑돼지 등을 결합한 상품 구성으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감귤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확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꼽힘. - 신제품 육성 및 영농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제품 만감류(가을향, 달코미 등) 현장 평가를 개최하여 품종별 특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함.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제주 기후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외국 품종 의존도를 낮추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감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서귀포시 감귤 농가가 선정되는 등 제주 감귤 농업의 기술력이 인정받음. 도는 이러한 선도 농가의 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일반 농가에 확산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영농 기법 도입과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계획임.

	감귤	<p>며 감귤을 포함한 제주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제주-칭다오 직항 항로를 활용한 물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함. '제15회 제주 수출인의 날'을 통해 수출 우수 기업을 포상하고,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신선 배송 체계를 강화할 방침임.</p> <p>- 고품질 재배 기술 전파 및 명인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년 이상 감귤 농사에 종사하며 고당도 감귤 생산 기술을 정립하고 '불로왕' 등 자체 브랜드를 확립한 강만희 농가가 농촌진흥청 주관 '대한민국 최고농업 기술명인'에 선정됨. 그는 청년 농업인과 창업농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 농업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함.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비가림 재배 등 시설 현대화와 체계적인 재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락가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입증함. 명인 교육 과정을 통해 후계 인력을 양성하고 소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기후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감귤 산업을 위한 기술 공유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경제·관광		<p>- AI 및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잇뉴'가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상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중진공의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됨. 이는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컬 공급자와 다양한 수요를 매칭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 기술로 평가받음. · 제주개발공사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동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취수원 관리를 위해 기존 단일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은 AI 기반의 '양상불 예측 모델'을 도입함. 이를 통해 가뭄 등 이상 기후 시에도 지하수위 변동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과학적인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p>- 바이오 및 식품 산업 제조 인프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운영하는 청정기능성식품공장이 캔디류(액상스틱 젤리, 정제)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추가로 획득하여 제조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함. 이미 구축된 GMP 인증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형의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도내 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함. · 제주대학교는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테크노파크 등 핵심 기관과 협력하여 화장품 기업의 R&D, 임상 검증, 인증, 해외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뷰티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출범함.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이오 소재 산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혁신 플랫폼 기반을 구축함. <p>- 자율주행 및 교통 인프라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탐라자율차'의 성공적 운영과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함. 제주공항-중문 구간뿐만 아니라 성산일출봉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노면 청소차 운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짐.

경제·관광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설경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여 한라눈꽃버스를 증편하고, 1100고지 휴게소 정류소를 확장하여 탑승객 대기 공간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개선함. 또한 비상 정차대와 회차지 조성을 위한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조성함.
	여행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여행 트렌드 ‘런트립(Run-Trip)’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관광공사의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제주 여행과 러닝을 함께 언급한 게시물이 4년 새 54% 증가하며 ‘런트립’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음. 특히 ‘버킷리스트’로서의 인식 확산과 함께 혼자 달리는 ‘혼런’에서 함께 달리는 ‘크루’ 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오름이나 해안도로를 달리는 트레일러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한라산, 따라비오름, 해안도로 등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러닝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련 대회에 대한 언급량도 5배 이상 급증함. 계절마다 열리는 다양한 마라톤 및 트레일러닝 대회가 러너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문화 체험과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 - 관광객 식음료(F&B) 소비 패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방문 관광객의 소비 분석 결과, 전체 경비의 41%를 식음료에 지출하여 도민 소비 규모를 앞질렀으며,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회’로 나타남. 관광객들은 비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제주다움’이 있는 음식에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높았으나, 기대한 맛과 분위기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됨. 숙소에서 편하게 식사를 즐기려는 수요 증가로 관광객의 배달 및 포장 이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회 메뉴의 포장 수요가 높음. 그러나 회 메뉴의 배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포장·배달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요구되며, 맛과 분위기 등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에 맞춘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수용 태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 관광객의 회복세와 더불어 중국, 대만 등 국제선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며 11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6만 명 이상 늘어남. 특히 최근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전망됨. 올해 제주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이 2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주시는 이를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 및 다양한 환영 행사를 추진함. 향후 자동 입국 심사대 설치 등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과 결합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크루즈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채소 과잉 생산 대응 및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제주 월동채소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도와 생산자 단체는 10% 자율 감축을 결의하고 종합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함. 양배추연합회 등 품목별 단체 주도로 출하 시기 조절, 저장 지원, 통합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공급량을 분산하고 시장 가격 지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섬.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상품 외 감귤 유통 단속과 더불어 월동채소의 공영 도매시장 반입 비율을 낮추고 판로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수립함. 농산물 가격안정제 가동 준비와 함께 대대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산자와 행정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함. - 수산 자원 회복 및 대량 생산 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로 급감했던 제주 토속 수산물 ‘오분자기’가 지속적인 방류와 연구 끝에 생산량이 10년 전 대비 약 9배 증가하며 자원 회복에 성공함. 오분자기가 고수온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해조류 감소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에 대응한 유망 수산 자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생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항만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폐기하는 대신 마을 어장에 투석하여 전복, 소라 등 수산 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자원 순환형 사업을 추진함.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갯녹음 현상 등으로 황폐해진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어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함. - 제주 고유 생물자원 활용 및 제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테크노파크는 제주 자생 식물인 호자나무의 부정근 추출물에서 탁월한 피부 재생 및 콜라겐 생성 효능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함.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자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소재 개발을 지원하여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 전통 발효 음료인 ‘싯다리’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표준 규격 마련 및 상품화 촉진의 계기가 마련됨. 이는 제주 고유의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 업체들이 학교 급식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자산 증가와 소득 불균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조사 결과, 제주 지역 가구당 평균 자산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10년 사이 급증하여 전국 4위를 기록함. 순자산 역시 4억 8천만 원대로 비수도권 중 최상위권을 보였으나, 자산의 대부분이 실물 자산(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금융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 구조의 불균형을 보임. · 자산 규모는 전국 상위권이지만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남.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부채 부담이 여전하며, 소득 증대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인한 자산 증가는 실질적인 가계 재무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역 금융기관 건전성 및 연체율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연속 상승하던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9월 들어 소폭 하락하며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업 및 가계 대출의 잠재적 부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확실성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업무 협약을 맺고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보증·대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함.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상거래 신용 지수를 활용한 공급망 금융 상품 개발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금융권의 지역사회 공헌 및 나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과 농협 등 도내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상생을 실천함. 제주은행은 18년째 이어온 김장 봉사를 통해 누적 55톤의 김치를 지원했으며, 농협 역시 취약 가구에 농산물 꾸러미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은행 등은 학생,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금융 교육과 채무 조정 상담을 강화함.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금융 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동 점포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응, 왜곡, 민원, 태영호, 유족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형동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노형동 소재 민간 자원순환관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선 사안임. 화재 당시 시설 내부에 폐기물이 4~5m 높이로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력 172명과 장비 37대를 투입해 연소 확대를 막고 약 5시간 만에 완전하는 등 인명 피해 없이 대응 체계가 가동됨. ·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매캐한 검은 연기가 제주시 도심지까지 확산되자 제주도는 즉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 접근 자제 및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시민 안전 조치를 시행함.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특별 점검 및 화재 위험도 등급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함. - 해안 경계 및 마약 유입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중국인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및 최근 해안가 마약류 발견 등 해안 경계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해안경비단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함. 레이더 전파 탐지 인력을 2배까지 증원하고, 열영상탐지장비(TOD) 운용 방식을 거점 초소 전담제로 개선하며, 해경 및 해병대와와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케타민)가 17차례나 발견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서귀포 광치기해변 등 현장을 점검함.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주민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고 동절기 해양 사고 대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주문함. - 버스 화재 및 학교 폭력 대응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시내버스 698대 전체에 '산소발생 화재대피용 생명구조 마스크' 2,544개를 비치하는 화재 대응 강화 조치를 시행함. 해당 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공급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는 장비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비상 대응력을 높이기로 함. ·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범죄 및 학교 폭력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제주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자치경찰단 간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 양 기관은 학교 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호 연락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영호 전 의원 4·3 왜곡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역사적 사실을

지역·사회	왜곡	<p>왜곡했다고 판결함. 재판부는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태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왜곡 발언이 4·3희생자유족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음을 법적으로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판결은 4·3을 공산 폭동이나 북한 지령설로 왜곡해온 일부 보수 세력의 주장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4·3 관련 단체들은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역사 왜곡과 편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함. <p>-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책 공유 회의에서 제주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역사를 왜곡·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내 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함. 이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혐오와 비방, 명백한 허위 사실로 역사를 왜곡하여 도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제주도는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시내 곳곳에 게시된 4·3 왜곡 현수막이 관광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각 행정시와 협조하여 불법 및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행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함. <p>- 박진경 대령 유공자 서훈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하여 수많은 양민 학살을 야기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음. 4·3 단체와 시민사회는 가해 책임이 명확한 인물을 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고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함. · 제주도와 4·3 관련 단체들은 박진경 추도비 인근에 그의 과오를 적시한 '진실의 비' 설치를 추진하는 등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보훈부의 결정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비판받음.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4·3의 본질을 흐리고, 과거사 청산과 화해·상생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 사례로 지적됨.
	민원	<p>- 교사 사망 사건과 민원 대응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지난 5월 사망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음에도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남. 학교 관리자는 민원 내용을 교사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사의 병가 사용을 만류하는 등 민원 처리에 있어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확인됨. · 유가족과 교원 단체들은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민원 대응 실패와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고리 자르기' 식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함. 이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시스템이 부재했음을 지적하며,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지역·사회	민원	<p>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p> <p>- 상하수도 등 생활 민원 해소 총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분야의 핵심 민원 30건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해소 대책을 추진함. 비양도 어업 피해, 판포리 저수압 문제 등 장기 미해결 민원 17건을 해결했으며, 법령상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처리 시스템 점검 및 공무원 사칭 피싱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p>-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평가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된 텍스트 내에서 '민원' 키워드와 직접 연관된 3번째 토픽의 관련도가 50% 미만일 경우 제외해야 하나, 본문 내 교육청 민원 대응 이슈가 매우 방대하여 세분화하거나 상하수도 외 다른 민원 사례를 찾음) 제주시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복지 분야 민원 해결 및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인정받음. 이는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도입 및 안전 요원 배치 등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한 부서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태영호	<p>- 태영호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태 전 의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함. 재판부는 "4·3은 김일성 지시"라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며, 유족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물음. ·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보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 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족 측은 사법부가 4·3 역사 왜곡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힘. <p>- 4·3 단체의 비판 및 사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호 전 의원이 재판 내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함. 이들은 태 전 의원이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태영호	<p>한의 역사 인식과 윤리 의식을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유족과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역사 왜곡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단체들은 태영호 전 의원의 망언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4·3을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이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규정함.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4·3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향후에도 태 전 의원과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p>- 4·3 역사 왜곡 처벌 입법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영호 전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제주 사회 전반에서 4·3 역사 왜곡 및 편향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고 있음.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현행 4·3특별법으로는 명예훼손 발언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함. · 이번 민사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 역사 왜곡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치권과 4·3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역사의 진실을 보호하고 유족들의 아픔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지역·사회	유족	<p>- 4·3 유족회의 명예회복 및 법적 승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4·3 왜곡 세력으로부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켜내는 성과를 거둠. 법원은 유족회를 명예훼손의 피해자 당사자로 인정했으며, 유족회는 이번 판결이 4·3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고 유족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함. · 유족회는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거리에 나부끼는 왜곡 현수막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함. 이들은 태영호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역사 왜곡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함. <p>- 교사 사망 사건 유족의 진상조사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내 중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들은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하고 은폐된 조사"라며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힘. 유족 측은 교육청이 유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 쟁점인 허위 경위서 작성 및 관리자 책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며,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함. · 유족협의회는 교육청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또한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대한 형사 고발 및 중징계를 요구하며, 교육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p>- 쿠짱 배송 기사 유족의 음주 누명 탈피</p>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중 사망한 택배 기사 유족들은 고인에게 씌워졌던 음주운전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함을 풀게 됨. 당초 배송 대리점 측이 제기한 음주 의혹으로 인해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중고를 겪었으나, 경찰의 과학적 증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님이 공식적으로 확인됨. · 유족과 택배노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을 두 번 죽인 쿠팡과 대리점 측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들은 고인의 죽음이 과로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임을 강조하며,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의혹을 조작했다고 비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